

시민소통 플랫폼 ‘시민권익위원회’ 본격 출범

민선 7기 광주시의 대시민 소통플랫폼인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가 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권익위원회 출범은 ‘시민이 중심이고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펼치겠다는 민선 7기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무등홀에서 이용섭 시장, 최영태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선정한 시민 대표 이지현씨(44)와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생활불편·정책제안 자문 이용섭 시장 “혁신·소통·청렴 바탕 봉사기관 역할”

청년대표 강영근씨(27)가 시민권익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글을 편지에 담아 직접 발표한 뒤 공동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시민권익위는 앞으로 시민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여성, 청년 등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며 “시민권익위 출범은 현장에서 시민의 의

견을 경청하며 답을 찾는 열린 소통이자, 시민들의 자유로운 제안을 토론과 투표를 통해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로서 가장 정의로로운 광주를 만드는 수평적 협치의 도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권의 기능은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정책제안 등 해법 모색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며 “위원회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시민권익위는 1단계로 이 시장의 후보 및 당선인 시절 시민들로부터 접수 받은 생활불편 사항 및 정책제안 1,800여건에 대한 100일 내 해법모색의 자문을 하게 된다.

2단계로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 분과위원회 체제와 함께 심의와 의결기능을 갖춰 고충민원유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권고에서부터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의 최종 실행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매월 1회 이상 ‘현장 경청의 날’

을 운영해 시민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며 해결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최영태 공동위원장은 “참여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갈등·분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얼마나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시민권익위가 지역사회의 토론문화를 활성화해 갈등·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위원회의 첫 번째 정책결정이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방식 결정이 될 것이다”며 “공론화는 본래 목표에 위협받지 않는 방식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투데이뉴스

“지역특성 고려 대학평가” 이용섭 시장, 성명서 발표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학평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의 살생부’라 불리는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에서 조선대를 비롯한 광주·전남 대학 10여곳이 대거 탈락했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 대학은 이달 말로 예정된 최종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등으로 존립 위기로 내몰리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며 “지역대학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면일률적인 잣대로 대학을 평가한다면 지역대학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대학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시기에 지역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조선대는 호남인의 기금으로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으로 지난 71년간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고 약성 임치료와 치매연구, 치과분야 등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 의로기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잔결음 전남도,36억 들여 138곳 추진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무료 와이파이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국비 4억3,000만원과 지방비 13억5,800만원, SKT 부담 17억8,800만원 등 총 36억원을 들여, 관광특구 6개소, 시·군에서 지정한 관광지 62개소, 박물관 23개소, 도시공원 16개소 등 총 138개소에 연말까지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공공와이파이 설치 대상은 총 2483개소에 달한다.

현재까지 관광지 144개소, 공공기관 298개소, 복지시설 251개소, 교통시설 118개소, 문화시설 40개소 등 851개소(34.2%)에 와이파이 설치를 마쳤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 제정해야”

광주시·전남도 설립 추진동력 확보 ‘총력전’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많은 분이 확실하고 가장 빠른 설립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한전공대 설립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시·도,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한전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구성과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부 공무원들에게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빠르게 특별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휴가차 지역을 방문한 백운규 산자부 장관을 잠깐 만나 도민 우려를 전하고, 예정대로 한전공대가 설립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한전 측이 시·도간 확장성이 있는 부지제공 가능성을 평가해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보도됐는데 부지확



보, 지자체·주민과의 협조는 전남도가 적극 나서 한전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드릴 용의가 있다”며 “부지문제는 용역과정에서 타당성을 중심으로 해야지 시·도의 기여도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면전환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형국이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전남 시정을 방문한 이현민 한전공대 설립단장을 만나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공약대로 2022년 3월 개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명량대접촉제 실행계획 논의 박병호 전남 행정부지사가 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재)명량대접촉제사업회 2018년 제2차 이사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상훈 해군제3함대사령관, 최성진 해남부군수 등이 사들이 참석해 ‘2018년 명량대접촉제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순천 마그네슘 부품산업 육성 속도 낸다

입지 적정성 검토 마치고 예타 조사대상 선정 신청

자동차 등에 쓰이는 마그네슘 부품 특화단지 순천에 조성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 앞에 섰다.

7일 전남도와 순천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육성과 관련해 최근 균형발전위원회 입지 적정성 검토를 거쳤다.

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추진이 순조로운 기술성 평가, 타당성 심사 등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지난 4월 예비타

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 사업 기획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2025년까지 국비 등 2,686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구축, 특화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은 북한 광물자원과 남한 첨단기술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도 주목받는다. 환경남도 단전에 매장된 마그네사이트는 약 60억t으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미국 지질조사소(USGS)는 2016년 분석했다.

순천 해룡산단에는 포스코가 2007~2016년 917억원을 투자해 연간 600mm의 협폭 판재 670t, 2,000mm광폭 판

재 6,400t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마그네사이트를 가공한 마그네슘은 철과 알루미늄보다 강도가 높으면서 가볍고 진동 흡수성이 우수하다. 자동차의 경량화로 연비를 높이고 탄소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마그네슘 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 신소재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역 제조업의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고 남북 경제협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새천년 상품권’ 발행 추진

전남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내년 7월을 목표로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달 중 지역상품권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고 다음달 세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

다. 용역과제는 발행규모, 사업비,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QR코드를 이용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송금하는 시스템으로 개발 추진하는 ‘전남페이’와 함께 지역자급 역외유출을 줄이는데 상품권을 활용할 방침이다. 전남페이와 지역상품권은 김영록 지사의 공약이다. /정근산 기자

기초의원에 듣는다

“올바른 정책대안으로 보답”

국강현 광산구의원



“정의롭고 공평한 광산구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원칙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국강현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원(민중당·가선거구)은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원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주

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국 의원은 “주민들의 공복이라는 생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민들과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눴다”며 “이웃에 사는 주민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의 최우선 책무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다”며 “공정한 인사, 투명한 회계, 합리적 정책수립, 조례 제정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 의원은 “모든 구민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비를 견제 감시해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문제점을 파악해올바른 정책을 모색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발로 뛰는 생활정치 매진”

김재호 광산구의원



“이웃과 함께 밝은 동네를 만들겠다는 소신처럼 주민 곁에서 발로 뛰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호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올바른 견제와 감시는 물론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

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광산구 구도심과 신도심, 농촌동이 균형발전 전을 이루도록 주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지역사회의 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토대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을 우선 돌보며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경청하고 발로 뛰는 의정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구민의 신뢰와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며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통해 기초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분권시대 맞는 조례제정 앞장”

박경신 광산구의원



“광산구를 위해 제 인생의 한 분량을 내놓으려 합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의정활동과 조례 제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박경신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광산발전을 위해 유연한 생각과 무한한 상상력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민이 지역정치에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하겠다”며 “두 손 가운데 한 손은 구민을 위해 일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과 도심이 복합된 광산구 구도심을 이웃과 함께 살고 싶은 힐링도시로 변화시키고 싶다”며 “마을특성을 고려한 테마별 공감각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8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선임된 만큼 구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을 중점적으로 예산에 담아내겠다”며 “예산안 심의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든든한 지역밀착형 일꾼”

유영종 광산구의원



“광산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든든한 지역밀착형 일꾼이 되기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유영종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실천하는 생활정치를 통해 젊은 대표로 우뚝 서겠다”고 의지를 피

력했다. 유 의원은 “기초의원의 역할과 과제는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는 눈에 보이는 기반시설 정비만이 아니다”며 “주민들이 겪는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산구청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며 “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집행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행복한 광산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발로 뛰겠다”며 “앞으로 광산구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의정활동의 방향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고 덧붙였다. /유영봉 기자